

제327회국회
(임시회)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일시 2014년7월23일(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220호)

의사일정

1. 남북관계발전에 있어서 국회 역할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에 관한 공청회

심사된 안건

1. 남북관계발전에 있어서 국회 역할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에 관한 공청회 1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원혜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청회·간담회 등의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에게 위임해 주시면 잘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면 좋을 소재나 주제 또는 사업들에 대해서 좋은 제안들을 해 주시면 잘 받아들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큰 부담 없이 다양한 문제를 가볍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을 좀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북관계발전에 있어서 국회 역할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에 관한 공청회

(14시04분)

○위원장 원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북관계발전에 있어서 국회 역할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 개최 취지와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남북관계발전에 있어서 그간의 국회 역할에 대한 진단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의제를 설정하는 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진술인은 여야 간사 위원께서 각각 두 분씩 추천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은 호명할 때 일어나셔서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서보혁 진술인이십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유호열 진술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황지환 진술인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네 분이십니다.

네 분의 진술을 가나다 성명순으로 먼저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에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내용은 오늘 공청회 주제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아 계신 좌석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진술시간은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연철 진술인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연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연철입니다.

국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를 다루고 있는 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 관련해서는 국회는 제가 봤을 때에는 한 세 가지 정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남북관계에 관련된 입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 심의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기 남북관계에서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남북 합의의 지속성 문제입니다.

사실 정권별로 대북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면서 기존 남북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합의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의 제도화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선진국에서는 중요한 외교 정책에 관련해서는 초당적 합의가 관행적으로, 또 제도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발전특위,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남북국회회담의 위상과 역할을 좀 재평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제도화 문제인데요.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관련 입법을 제도화해서 정부의 정책이 법률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북관계의 미래지향성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국회는 남북관계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정부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단기적인 현안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방안과 같이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의 미래지향적인 제도화 문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경제협력동반자협정 같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관계발전특위의 중요한 과제를 저는 세 가지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5·24조치 관련된 문제입니다. 5·24조치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남북관계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남북경제공동체뿐만 아니고 현재 단기적인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5·24조치의 법률적 성격입니다.

사실 5·24조치는 남북경제협력뿐만 아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이라든가 또 유라시아 평화 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5·24조치는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중대합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제협력이 중단됐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통일부장관의 행정처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법률적 기초가 매우 모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제재, 적성국 교역법이라든가 수출관리법이라든가 수출통제법, 대외원조법 기타 등등 이러한 것은 예외 없이 법률의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일본이 북한에 취하

는 경제제재도 법률의 형식을 띠고 있는 거지요.

이 법률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재 관련 조항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거나 혹은 해제할 때 그 절차와 요건이 법률에 의해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비해서 5·24조치는 법률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완화나 해제의 시한이나 요건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24조치가 법률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한러 정상회담에서 물류협력을 위해서 나 진행 개선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이 5·24조치와 분명히 상충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법률이라든가 일본의 법률,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법률이라면 이것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절차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5·24조치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모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제재의 포괄성과 국제관례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의 양자제재나 또는 유엔 안보리와 같은 다자제재의 경우에는 목적과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도 평화적 목적의 인적교류나 경제협력 모두를 금지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과거 냉전시기에 일부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을 만나고 싶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북한을 방문할 수 없었니까 미국 시민권을 따서 북한을 방문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 냉전시기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지속돼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도 마찬가지겠지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북한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 북일 관계를 재개하면서 인적교류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동서독 관계에서 보면 인적교류의 역할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 사이의 관계에서도 1988년에 리덩후이 총통이 오면서 대 중국 정책을 바꾸게 되는데 그때 대만사람들이 본토에 있는 중국 친척을 방문할 수 있다 이것이 중국과 대만 사이의 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대

단히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4조치는 국제적인 제재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좀 과도하다, 그리고 분단국의 통일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전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경제 제재라는 법의 목적성으로 본다면 인적교류까지도 막는 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5·24조치와 다른 법률과의 상충적인 측면인데요,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발전법도 그렇고 남북교류협력법도 그렇고 남북협력기금법 같은 경우와 상충되는 측면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경우에는 북한 방문 승인이나 취소 또 주민접촉의 승인이나 취소 또 반출입의 승인이나 취소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결정하는 요건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24조치 같은 경우에는 방북 승인이나 주민 접촉 승인이나 반출입 승인 같은 것이 어떤 요건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는가가 매우 모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회가 5·24조치의 법률적 성격, 즉 제재의 목적과 대상, 제재 완화의 요건과 절차 이런 것을 이제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부가 5·24조치의 출구를 모색하는데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남북관계 발전법이 있고요, 그리고 남북관계발전특위도 사실은 남북관계 발전법의 제정 취지에 연결돼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각 당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고,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에 관해서는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초당적인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한다면 국민적 합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외교정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클 때 이 의견 차이를 나름대로 극복하는 미국의 사례

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북국회회담 관련해서는 80년대에도 예비접촉을 추진한 적도 있고요, 또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도 여러 가지 국회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노력한 측면들이 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2000년대 이후 남북 당국 간 관계가 활성화됐을 때는 북한이 국회회담의 역할을 부정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남북관계의 상황에서 보면 일종의 초당적인 논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국회회담이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조차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여러 가지 국회회담을 추진했던 환경과 굉장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국회회담 추진 문제에 대해서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름대로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이신 서보혁 진술인에게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서보혁 안녕하십니까?

남북관계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지난 역사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리하에 운영되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회는 행정부의 독선을 견제·감시하며 민의를 수렴해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을 주도해 나갈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제하에서 견제와 균형이 항상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 행정부,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철학과 통일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북한·통일 문제는 남북관계와 외교정책인 동시에 국내정치적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주도적 역할은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일·외교·안보정책에 걸쳐 있는 북한이 우리에게서 이중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를 포함한 남한의 모든 정치·사회집단은 대북정책을 민감하고 복잡하게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우리의 통일정책 수

립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물론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에서도 보듯이 통일은 법치와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추진해야 하고 통일의 미래상 역시 민주주의와 법치에 기반합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국회는 헌법과 남북 합의를 조화시킨 통일 국가의 비전을 규범, 법, 정책 등 3차원에서 제시하고 관리하는 안내자와 감독자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위상에 따라 국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 현실적인 정책으로 수립하고 정부 정책을 감독·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행정부의 통일정책 내지는 남북협상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고 통일부 내부의 행정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거의 의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북정책이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만으로 수립·집행될 경우에 국내적 논란을 야기하고 남북협상에도 유리하지 않고 그 결과 정책 환류에 난항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국회의 역할은 더욱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대북정책 사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속 위원들의 입법 및 관련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대국민 여론조사, 전문가 정책자문도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국민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해 초당적인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남북회담과 국내정치적 조정 문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 통일 문제가 한국 국내정치의 개입 변수로 작용하여 국내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최소화하고 국민 여론을 폭넓게 대북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초당적 대북정책 수립의 기초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 대북정책은 국가 또는 집권여당이 가져왔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국회 전체 차원에서의 역할은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에서는 상설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외에

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논의 내용이 그러나 지금까지는 큰 차별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외교통일위원회와 차별성을 가지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국회회담 준비, 나아가 통일에 대비하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준비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는 국회에서의 대북정책 논의입니다.

<표1>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국회는 그동안 남북합의서를 발효시켜오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표1>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2004년 6월 이후 남북 간 합의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회의 남북합의서 발효 결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국회는 따라서 남북 당국 간 합의에 대한 발효 채택 외에는 별다른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지금 발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제17·18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113건, 178건의 법률안을 접수·처리했는데 이 중 가결 법률안은 각각 20건, 4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회의 법률 발의 비중은 각각 98건, 152건을 기록했지만 가결 비율은 13건, 26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회의 법률 발의율은 정부에 비해 높은 데 비해 가결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편 <표3>은 통일부의 2014년 예산안인데요, <표3>을 한번 봐 주시지요. 보시면 14년 예산이 2013년 예산안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비와 남북협력기금의 비중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표4>를 보면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인데요, 여기서도 남북회담, 경제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개성공단 지원 등 남북관계 발전과 직접 관련된 사업은 대내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것은 남북관계 경색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부 예산은 정부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나마 규모가 작은 예산에서도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10%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전체 예산안 중에서 남북협력기금의 비중이 높는데 남북관계 경색이 예산안의 현실성에 의문을 던져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 국회도 국민들에게 어떤 설명을 할지 궁금합니다. 남북협력 증진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둔 예산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수년간 대부분 묶여 있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남북협력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의 적립, 정부예산 대비 1%의 통일예산 확보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국회가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그리고 원혜영 남북특위 위원장께서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 국회회담을 위한 우리 국회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표5>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처럼 정상회담 이후 특히 화해·협력 분위기에 힘입어 우리 국회가 다각적으로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했지만 공식적인 회담은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남북관계가 활발할 경우 당국 간 대화가 국회회담보다 더 유용하다는 북한의 전략적 판단 둘째, 국회회담을 위해 남북의회 각각의 의지와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때 국회의 의지와 준비가 있다면 남북관계 발전의 돌파구로 국회회담의 유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물론 회담 추진은 여론의 지지와 정부의 협조 아래 가능할 것이고 우리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실질적 위상과 권한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순수 국회회담 형식보다는 정당 연석회의 형식을 가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북한 노동당의 참여를 유도해 국회회담의 실효성을 거두고 우리 정치체제의 개방성과 다원성도 보여 주는 부수효과도 거둘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국회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행정부, 여야, 국회 상

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입법조사처와 전문가집단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하에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일차적 과제입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와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와 본 특별위원회의 불분명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와 관련해 효율성과 책임성 등 거버넌스 증진 차원에서 특위보다는 주요 과제별로 상임위원회 내에 약간의 소위원회를 두어 상임위원회의 관장하에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회가 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 책임 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정부정책을 감독하거나 국민여론을 대변하는 데 그칠 것인지 스스로의 위상과 역할을 적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생각합니다.

이는 가까이는 국회가 정부와 적절한 파트너십을 갖고 대북 통일정책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가까이는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 논의 그리고 멀리는 통일국가를 준비하는 통일헌법 수립의 문제와도 관련됩니다.

요컨대 국회는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준비를 위한 다차원, 다방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전체적인 안목이 다소 미흡한 가운데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에 그친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정책 시간대와 정책 대상을 결합시켜서 적절한 역할을 배치하고 그에 부응하는 조직 편제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서보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유호열 진술인에게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유호열 감사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북한 핵문제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현안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런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위원회의 공청회가 마련된 그 이유도 정부가 하는 역할 못지않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국회의 위상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는 데 이 공청회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지난 남북관계 흐름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특히 이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는 것으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기의 남북관계의 흐름을 보면, 물론 냉전시대는 우리가 직접적인 교류·협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마는 탈냉전 이후에 남북관계가 비교적 활성화되면서 또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가 마련되고 또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듯이 남북관계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시점도 있었고 북한과의 교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도 우리가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 동안에 남북관계가 비교적 허용이 되는 시기에 국회의 역할을 보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회 차원에서 독자적인 입법을 마련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그러한 실적은 정부 주도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또 경색되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역시 국회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다소 부정적인 또는 좀 미흡한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에도와 있는 것처럼 남북관계와 가장 관련한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에도 어떤 구체적이거나 가시적인 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결과에서도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으로 임명되신 정의화 의원이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국회 차원에서,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니라 또는 특정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였고, 또 어느 기관에서나 책임자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회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이 좀 더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또 하나는 남북관계 관련한 특별위원회의 역할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가 지금 동수로 구성이 돼서, 특히 원혜영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제가 열흘 전에 민화위에서 발표할 때 처음부

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면서 관심을 보이신 아
마 그런 것들이, 국회의장 또 특별위원회 위원장
또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의 리더십이 앞으로 국
회가 남북관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그런
부족한 점을 상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두고 향후 과제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
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물론
입법권도 있고 조사권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
한 것이 정부와의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북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 수립 과
정에서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다
른 어떤 기관이나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막강하
다’ 우리가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합니다마는 그
러한 역할을 십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
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
원회가 발표가 됐는데, 물론 그 발표 시점에 임
박해서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두 분이 당연직으
로 포함이 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
쨌든 상황이 잘 정리가 돼서 여야의 대표적인 임
무를 맡고 계신 정책위원회 의장 두 분이 참여하
게 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
각합니다.

물론 통일준비위원회가 앞으로 구성이 된 후에
업무 역할을 설정하고 또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
갈 때 국회와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마는 최소한 앞으로 정부가
독주하지 않고 국회와 상의하거나 또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그런 하나의 영향 기관으로 참여
할 수 있게 돼서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형성이 되면 그것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
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될 것이
다, 새로운 국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
다.

두 번째로 향후 과제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자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전문성 강화
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회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역
할을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은 보고서에서
보듯이 또는 많은 평가에서 보듯이 입법조사의
역할이 크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각 주요 정당에

일정한 임무를 부여한 것이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활성화하도록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남북
관계라든지 통일 분야에 관한 실질적인 그런 역
할을 하는 데는 아직은 미흡했다 그래서 이러한
입법조사처라든지 정당 정책연구소, 광의의 국회
와 연관된 이런 부서의 전문성 그리고 실제 각
의원실이나 또는 위원회 산하의 정책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정부가 주도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그렇고 또 보완하
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회에 그런 정책 결정 또
는 정책 수립의 전문성 기능을 제고할 그런 필요
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국회의 전문성이 제고돼야만 그것이 국
회와 정부의 어떤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북 간의 국회회담이 되었든 또는
남북 간의 정당 교류가 되었든 대북 통일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북한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정책
과 정책을 담당할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이 핵심적인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국회가 국론 수렴하는 데 또
이익 집약의 장으로서 초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에 관한 여
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정책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보면 우리 사회의 국론이 어떤
이합집산의 핵심적인 현안 과제가 대북정책 또는
통일정책이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
다. 다시 말해서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하더라도
대북정책이나 통일 문제에서만만큼은 협력보다는
갈등의 요소가 크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의 보혁갈등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쉽
게 말하는 남남갈등 이러한 부분들이 국회를 통
해서 수렴이 되고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확대되고 악화되는 그런 과거의 선례
를 이제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
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들을 제도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
키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초당적인 협력을 한다 또 국론 수렴을 한다 하는
것은 빈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국회 내의 각 정당들 간의 토론과 협의뿐만 아니라 또는 국회와 정부 간의 역할 분담만이 아니라 국회와 시민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앞으로 가장 갈등적인 요소가 많은 대북정책을 수렴해서 하나의 통합된 안으로 정부를 상대로 또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유호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황지환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황지환 이렇게 국회의 남북관계특위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다른 진술인들께서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의 과거 국회의 일반적인 역할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저에게는 또 특히 현재 남북관계의 상황과 북한의 대외정책적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개괄을 해 주고 또 현재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강성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 이후에 소위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발표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북한의 노력들을 살펴보았을 때 과거의 김일성 시대나 김정일 시대의 국방·경제 병진노선이나 선군노선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경제 병진노선이 사실상은 핵무력에 강조점이, 방점이 찍혀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남북관계나 북한의 대남정책이나 대외정책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

를 가까운 시기 내에 가져올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를 살펴볼 때 북한이 바라고 있는 바는 어떤 것이냐면 과거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고난의 행군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2012년도 경제성장률이 1.3%였고 또 최근에 발표된 작년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1%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핵무력에 방점이 있다고 하면 남북관계 발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남북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어떤 요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특히 남북관계에서 또 중요한 것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북한의 핵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오면서도 세 번째 핵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치를 논의하고 있고 특히 2008년 12월 마지막 6자회담 이후 최근 시기까지 6자회담이 사실상 다시 재개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세 번의 핵실험 이후에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핵구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회도 역시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어떤 협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국회가 북한이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관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어젠다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북중관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북중관계는 동맹관계이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동맹관계와는 좀 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점을 몇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섭섭함이라든가 아니면 답답함이라든가 불안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졌듯이 시진핑 정부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 북한보다 남한을 우위에 둘 것이냐 어떻게 둘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북한이 느끼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라든가 그런 위기의식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국회의 역할도 특히 대중정책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외교 활동을 하실 때, 대외적인 활동을 하실 때 남북관계에 관해서 특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에게 있어서는 북한이 전략적인 자산이기도 하고 전략적인 부담이기도 한 것처럼 북한에게 있어서도 중국은 전략적인 자산이기도 하고 전략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미묘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가 잘 인식을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남북관계 발전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또 국회 역시 과거와 비교했을 때 남북관계특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은 그동안 많이 제시하지 못했던 것 역시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 있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계속해서 그런 사이클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국회가 이런 어려운 환경 딜레마 속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여겨 볼 때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회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외교정책이나 아니면 특히 북한 문제를 다루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부나 백악관을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고 또 CRS 같은 곳에서도 주기적으로 북한 관련된 리포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조사처가 있고 그렇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의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론 국회에 있어서 여야의 어떤 의견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데 작용을 할 수 있지만 행정부와 그리고 우리 청와대가 생각하는 부분과 조금 다른 국회만의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공유의식을 만들어 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가질 수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국회 안에 계신 분들과 밖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많이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국내적인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도 국제화와 세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의원외교를 하실 때,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하실 텐데요, 특히 남북관계특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하실 때 꼭 정부 간에 하는 과거의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 스타일뿐만 아니라 2트랙에서도 민간 부분에서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의회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은 그동안 많이 보아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회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관계기본계획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되고 또 2013년에서 17년까지의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2014년도는 그 시행령을 통일부에서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의회가,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특히 남북협력기금이 한 1조가 조금 넘는 그런 금액들이 사실상 집행이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고 또 집행이 되더라도 사실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어젠다들이 집행되기보다는 단계적인 차원에서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우리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발족을 했는데 국회의 관점에서 그냥 통일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헌법적인 것이고 법 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시면 이 특위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황지환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진술인의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일단 7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질의하실 뜻을 밝히신 위원님이 총 열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 돌아가고 더 필요하면 추가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위원님께서 첫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네 분의 교수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연철 교수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남북국회회담 추진과 관련해서 정의화 의장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도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는 딱 막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된 지가 한참 됐고 이런 상태에서 남북국회회담이 가능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참 쉬워보이지는 않는데 남북국회회담은, 정의화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남북국회회담이 실질적으로 열리려면 여건 조성을 위해서나 구체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치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장애요인이 있다면 어떤 걸 제거해야 가능할 것인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술인 김연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북한의 수용 가능성하고 정부와의 협력 이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일본하고 관계를 진전시킬 필요성은 북한 내부의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또 정세로 보면 북중관계나 북미관계에서 북일관계나 남북관계 같은 것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북관계에 대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 국회의장께서 방북을 한다든가 또는 남북국회대표단이 방북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북한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지속성, 국회회담이라는 제도적 형식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제를 갖고 또 그 논의의 결과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전망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지적을 했지만 지금 김대중·노무현정부 그리고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오면서 대북정책이 굉장히 달라졌고 거기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상황도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합의의 지속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하고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남북경제협력이나 교류협력에 관련된 법제적 측면에서 논의의 틀을 갖고 가는 것은 북

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겠다, 다만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웅래 위원** 서보혁 교수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교착된 것은 천안함 사태 이후에, 천안함 사태 부분과 그것 때문에 생긴 5·24조치가 지금 두 개의 큰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 쪽에서는 5·24조치를 해제하라는 거고 우리 쪽에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인정 안 하는,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한쪽은 사과하라는데 한쪽은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똑같은 하나밖에 없는 사실을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공방은 할 수 있는데 답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한쪽이 먼저 양보하지 않고서는 풀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한쪽이 양보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에서 지금 숨통이라도 트이게 하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서보혁**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 하에서 여전히 5·24조치를 유지하고 있고 또 그것과 무관하게 현 정부의 대북관, 통일정책 방향이 아마 북한이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오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서 일단 정책방향에 있어서 5·24조치와 관련해서 그 명분과 형식은 유지해 나가되 새로운 남북교류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사실상 무력화 약화시켜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또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을 통한 접경지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다국적인 접근이나 또는 민간협력 1.5트랙 이런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가와 있는 교황 방문이나 아니면 아시안게임에 대한 협력이나 또 제3공간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전진에서는 앞에서는 민간이나 기업들이 할 수 있겠지만 남북교류협력이 발전해

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 정부 의지와 국회의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여론이나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어떤 기본적 자세를 쉽게 풀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용적으로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많이 나와 있다, 야당도 제시를 했었고 전문가들도 많이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걸 받아서 대북정책에 새로운 전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다음으로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동완 위원**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저도 좀 의문점이 있어서 어느 분한테 여쭙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천안함 사건도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어떤 정책토론회에 갔더니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신변안전 보호 이것을 요구했는데 북한에서는 그걸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누구한테 했느냐 그랬더니 현정은 현대 회장한테 얘기를 했다, 그래도 우리 당국한테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니까 문서로 달라 그러니까 문서로 그걸 왜 요구를 하느냐, 수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됐지 그걸 왜 문서로 요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금강산 재개 문제는 해결 못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사석에서 현정은 회장님께 그걸 물어봤어요. 진짜 그 얘기를 들었냐고 그랬더니 진짜 들었대요. 김정일 위원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문서로 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북한의 독특한 수령체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수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게 곧 법인데 남한에서는 그걸 자꾸 문서로 달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를 두고 보면 남북의 국회, 지금 교수님들께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도 사실은 막연한 불안감 불신 이런 게 내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문제는 액면보다는 이면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어떤 공론화하는 것보다는 비밀협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공론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것은 내면 속에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김연철 금강산 관광 재개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한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것을 공식 회담에서 문건의 형태로 제시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특사단이 왔고요, 그때 김양건 통일선전부장이 왔을 때 이쪽의 전직 통일부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니, 위원장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문서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금강산 관광 재개가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김양건도 사실은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는 협상의 지혜 이런 것을 발휘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천안함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범죄와 처벌을 우리가 구분했을 때 그 범죄를 전제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범죄의 어떤 진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범죄를 전제했을 때 처벌의 실효성 문제를 한번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살인자라 하더라도 징역 5년인지, 징역 10년인지, 징역 20년인지 형량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5·24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 형량이……

○김동완 위원 제가 여쭙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상대가 믿음으로 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됐으면 그다음 번에 서로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같이 그렇게 서로가 불신의 과정에 있는 이 부분의 상태에서 국회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우리가 결론을 맺을 것이며 그게 성과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을 전문적으로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 아까 현정은 회장은 ‘우리가 북한 수령체제를 잘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지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술인 김연철 역시 위원님 지적대로 저는 불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이라는 것은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지켜지지 않거나 결렬된 역사적 경험들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불신감을 전제로 해서 남북관계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요.

다만 남북관계에서의 신뢰라는 것은 저는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불신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동완 위원 황지환 교수님께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이야기하면서 ‘김정일 때와는 달리 인민경제 향상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 쪽에 김정은 체제는 집중을 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면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라고 했더니 참모들이 ‘이것은 수력발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핵발전으로 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을 제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너무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완전히 김정은의 판단, 이야기에 따라서 북한체제가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걱정스러운 일인데 황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황지환 저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 지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나,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커다란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그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겠지요. 그런 고민을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도자가 된 정당성을 북한 내

에서는 최소한 확보를 했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하는 것이 정당성이지만 최소한 북한 내에서는 백두혈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했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성취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동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유호열 교수님께 하나 여쭙어 보고싶는데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휴전선에 다니면서 미사일 쏘고 로켓포 쏘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적은 미국이다’ 그런 얘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 북한은 미국이 주도를 해서 북한을 침략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을 침략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을 침략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그런데 왜 북한의 지도층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진술인 유호열** 일단 북한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체제를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은 사실인데 최근에 북한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중국에 대한 불신 또 중국의 지원이 없을 때도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수단은 결국 자체 개발한 미사일과 핵 이 능력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면서까지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은 하지 못하지만 그런 무력 시위의 또 다른 목적은 중국에 대한 일종의 무력 시위, 항의성 시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동완 위원** 그러니까 미국이 북침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체제 유지용이다?

○**진술인 유호열** 그렇습니다. 체제 유지가 크고 그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내적 또는 대외적으로 그런 역량을 필요 이상으로 과시하는 것이 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원혜영** 김동완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동완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원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림 위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金光琳 委員** 김연철 교수님하고 황지환 교수님께 5·24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5·24조치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하고 지원 원천 보류시키고 그리고 방북도 불허하는 조치 아닙니까? 이게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에 된 건데 금년도 5월에 경실련 통일협회에서 북한 통일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5·24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문가 분들입니다.

‘남한이 더 큰 피해가 있다’ 하는 게 52%, ‘해제·완화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찬성이 91%, 반대가 9%입니다. ‘왜 그러느냐?’ ‘경협 확대해야 된다’ 62%, ‘긴장 완화’ 25%, 그런데 해제·완화 방법은 ‘전면적으로 해라’ 57%, ‘부분적으로 서서히 해라’ 30%인데 정부의 입장은 어떠냐 하면 ‘북한의 우선 사과 후에 해제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113명 중에 1명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전부 다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는 현실론과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열어 주면 계속해서 앞으로 북한은 도발하고 그다음에 시간 끌고 또 보상 조금씩 되풀이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명분하고 현실 사이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연철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 황지환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연철** 지금 위원님이 보여 주신 표, 그러니까 대체적인 의견, 왜 저런 의견이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사실 5·24조치는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金光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죽 설명하시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정부 입장대로 그래도 가야 된다’ ‘아니다 전문가 입장으로 가야 된다’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고 ‘이렇기 이렇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연철** 저는 당연히 전문가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 이유는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겁니다. 5·24조치는 결국 북한에 고통을 주기 위한 조치인데 실제로 보니까 북한에 고통을 주지 못하고 우리 중소기업만 고통을 준 측면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본다면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은 일단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게 바

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金光琳 委員** 금강산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 이런 게 만약에 또 되풀이된다고 해도 조금 시간 끌고 있다가는 이렇게 현실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진술인 김연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제제재에 관련되어서 설명할 때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제재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처벌할 때 그게 법률적 형태를 띠려면 예를 들어서 처벌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5·24조치에는 그게 없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光琳 委員** 논리적인 문제다, 황지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황지환** 일단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5·24조치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북 정책의 방향성, 가령 국정과제 124번에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도 5·24조치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해제되는 것에 바탕을 두고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제가 이해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도 아직은 상황이 성숙되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24조치가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전에 Foreign Affairs에 A New Kind of Korea라고 하는 글을 쓰셨을 때도 그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은 5·24조치와 기존에 했던 부분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5·24조치가 가지고 있는 득실을 조금 따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것이 득이 더 많다고 느껴지면 그것이 지속되겠지만 실이 많다고 느껴지면 그것을 해제하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이나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나 이런 것이 재발된다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남북관계의 불행한 모습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면 대북 제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남북관계가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트러스트폴리틱(trustpolitik)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신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현 정부 내에서도 대북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光琳 委員** 그러니까 당장은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뒤 보고 신뢰를 쌓아 갈 수 있는 계기가 있을 때 그때 5·24조치 푸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셈입니까?

○**진술인 황지환** 지금 현 정부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 3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전문가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이 어떤 오퍼(offer)를 하면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를 하고 그런 정책들을 지금 취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과연 이 5·24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해제를 한다 그러면, 해제하거나 완화를 한다고 그러면 해제하고 완화하고 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7월, 8월에 해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金光琳 委員** 그러니까 선 해제 후 보완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진술인 황지환**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라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실보다 득이 더 많았다고 평가를 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金光琳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홍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이런 사안을 다루는 것은 저는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교육문제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와 진보를 초월해서, 당파를 초월해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이고 민족의 미래와 직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시한을 늦춰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평소 보수정권 때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있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때보다 지금 국내적 상황으로 보자면 저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어떤 의지나 분위기는 무르익어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도 통일대박론 이야기를 했고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하지요, 국회의장도 남북 국회회담 추진하려고 하지요. 지금 국민 여론들도 남북 국회회담을 포함해서 대체로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내적 상황은 이렇게 보수층과 아울러서 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와 또는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은, 물론 5·24조치 문제도 지금 언급이 됐었고 핵 문제, 북한의 핵개발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결부돼 있기는 있을 겁니다마는 또 남북관계, 남남갈등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특위에서 비단 남북정상회담 문제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런 5·24조치 문제, 현실적인 우리의 해결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그다음에 남북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민간교류와 관련해서도, 사회·문화적 교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이후에 좀 폭넓게 논의를 할 수 있는 특위가 되기를 우선 바라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위가 국회회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오늘 주로 남북 국회회담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우선 나와 주신 네 분의 진술인께서는 대체로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특히 국회회담을 놓고 보더라도 행정부 중심성이 그동안 너무 문제지 않느냐, 너무 제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우리 의원들이 단순히 외교부에 모든 외교를 맡기는 게 아니라 의원외교활동을 통해서 국익을 신장시키는 실질적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연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몫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일들이 참 많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정비도 해야 되고 또 교류협력 촉진도 시켜야 되고 국민여론 수렴도 해야 되고요, 남남갈등을 해소시키는 역할도 저희가 해야 되고 정부의 이런 대북정책에 대한 더 철저한 관리감독 역할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참 할 일이 많은데 남북 국회회담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지금은 전문가들 안에서는 정부가 어찌 보면 정부 중심성을 너무 강조하면서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좀 막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4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딱 그렇습니다. 국회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대북정책 틀 안에서 추진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뜻을 통일부가 여전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은 말로는 통일대박론 이야기를 하고 통일준비위원회 이야기를 하지만 각 분야의 교류나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결국은 그래서 남북의 신뢰를 좀 더 회복 또는 증진시키는 데 뒷받침 역할을 해 줘야 될 정부가 너무 그런 신중론 이런 태도를 견지하면서 오히려 그런 속도를 못 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김연철 교수님, 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김연철 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좀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영역도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의 결정을 또 존중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남북 국회회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나 의견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구시대적인 인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입법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기에 행정부가 입법부를 그렇게 보느냐에 대한 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홍근 위원 말씀처럼 실제 우리 남북관계특위나 국회가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게 성과물을 내놓고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제가 보기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 국회회담만 놓고 보더라도 어찌 보면 그 성사의 키는 정부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본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황지환 교수님께 하나 좀 여쭙 보겠습니다.

아까 발제문에 보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이나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한반도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소위 비핵·개방·3000 이것의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핵문제나 천안함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5·24조치 이후에 더 얼어붙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저는 말 그대로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기 그림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제출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에 대한 경제부흥 프로젝트,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구상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신뢰 구축, 신뢰 형성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지 않은 조건에서 한 발짝도 지금 떼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전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황지환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은 과거의 어떤 정부와도 차별성을 가지고자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도 차별성을 가지고 그 이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와도 차별성을 가지고 싶어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별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자 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는 현 정부가 보여준 국정과제나 혹은 대통령께서 취임 이전에 쓰셨던 아까 말씀드린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하고 싶은 그런 방향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남북관계의 현실상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 정부가 좀 아쉬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아쉬움이 있고 또 아쉬운 부분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체제의 속성상 우리를 굉장히 섭섭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여론도 악화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상당히 프리컨디션, 전제조건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제 나름대로의 기대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과거 지난 정부보다는 훨씬 더 그런 전제조건을 극복하는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협상의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희 위원 박왕자 씨 사망 사건, 연평도 사건 이렇게 해서 5·24조치가 내려지고 실제로는 남북한 관계가 계속 회복해 왔습니다. 개성공단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제 거의 되는 게 없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5·24조치 해제하라고 주장해도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마이동풍이었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손해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남북 간 경험 하던 기업인들 고통 겪고 있고요. 예컨대 개성공단은 애초 계획으로 하면 지금 엄청난 규모로 커져 있어야 하는데 이게 그냥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추가 입주 없고요. 배후단지 개발 이런 것 안 하고 심지어는 이명박 정권 때, 참 기가 막히네, 북한노동자 기숙사 짓자 그랬더니 ‘단체행동의 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 ‘체제 불안 요소가 있어

서 안 된다', 이게 북한 땅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무슨 놈의 체제 불안 요소가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참,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반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와해됩니다. 경험 기업들은 기업활동이 불가능해졌고 이제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인들 많이 생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부가 허가해서 했는데 손해 봐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장사하다 손해 보면 손해배상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게 행정조치니까 행정부를 상대로 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정부 밑에서 사업 하는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문화교류사업, 거의 중단이지요. 거래말큰사전, 이것 잘 안 되고요. 북한 유적 조사 복원하는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학과도 한창 인기가 팬찮다가 지금은 사양학과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이런 것은 우리 국민의 다수가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짚막짚막하게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우선 남북관계의 특성상 모든 것을 법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정부의 행정조치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너무 법적 근거 없이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제재할 때 그냥 대통령 성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연철 진술인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 등에 관해서 법적 근거가 좀 더 자세히 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것을 다 규율하는 법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의 특성을 보면. 대략 어느 정도를 규율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연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행정명령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법률적으로 근거가 돼 있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하는, 그러니까 그 시한이 되면 이게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그만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5·24조치는 지금 그런 게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인적 교류를 말씀드렸는데요.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북하거나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할 때 예전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우리가 좀 개정을 해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완화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아무나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법률적인 근거를 해서 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민간이 됐든 아니면 지방자치가 됐든 그런 부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목희 위원 자, 이렇잖아요. 5·24조치 쓴 다음에 아까 수많은 손해가 생겼고요. 예컨대 정부가 '경제협력해라' 허가를 해 줘서 갔는데 이제는 북한과 그게 막혀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고 실제로 정확한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입은 피해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분들, 무슨 재벌이 한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 법안에 그동안에 남북관계의 검색으로 인해서, 단절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기업들이 많겠지요, 그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술인 김연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서 일시적인 특별조치로서의 보상의 필요성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제도적인 차원에서 손실보전 조항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한다든가 아니면 보험제도 같은 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기는 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정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목희 위원 서보혁 진술인에게 제가 물어보

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남북관계에서 일단 제가 보기에
는 국회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습니까마는 대
통령이 하는 역할이 그 중심점이지요. 그것은 어
쩔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국회회담
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까 공무원보다 국회의원은 역시 유연하게 여러
가지 사고할 수 있고 유연하게 뭘 할 수가 있는
데 국회회담, 아까 박홍근 위원님 그런 얘기 했
습니다마는 물론 정부가 왕래를 허락해 줘야 가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쪽 국회가 하자
그리고 북쪽도 호응하면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정부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국회회담을 현 시점에서 조만간 가까운 장래에
하게 된다면 그 국회회담에서 국회가 자신들이
가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논의하
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서보혁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이목희 위원 글썄요, 그것……

○진술인 서보혁 그러나 지금 정세와 또 현재
이 특위에 주어진 임무를 봤을 때는 역시 남북
간 관계 경색된 것을 해소하는 것하고 교류협력
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저는 그래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산가족 상봉, 서신 왕래
를 포함한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서 파생된 인도
적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의 두 국회, 의회가 무
한책임을 분담된 겨레 앞에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공약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
인 실효를 볼 수 있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당국 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네 차례, 7·4기본합의서 그다음에 6·
15, 10·4 그 이후에 또 있을 수 있는, 그러나 현
재까지 네 차례 있었던 남북 간 합의를 국회 차
원에서 기념하면서 신뢰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
는 이런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목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양창영 위원 양창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호열 교수님께 생각을 묻겠습니다.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
하는 것을 우려해서 국회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아까 강조를 하셨는데 역할 강화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
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평화통일 관계 일
을 많이 해 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또 국회와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겠지만 그 방
법이나 역할에 있어서 크게 다른 부분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교수께서 평소에 생각하
셨던 국회의 역할하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특
정 지을 수 있는 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유호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우리가 인정해
야 되는 그 출발선상에서 정부와 국회의 역할분
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우리 국회는 그 성격이나 위상이나 또는 할 일들
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국회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보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오해나 또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너무 간과하면서 접근하게 되면 또
다시 불필요한 남남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위험
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남북 국회
회담은 일종의 하나의 교류협력의 새로운 형태로
출발하는 소박한 그런 의미, 그래서 그것을 국회
회담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
하는 어떤 현안을 놓고 거기에서 타협을 하고 결
정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종의 민의를 대변하
는 북한식의 최고인민회의와 우리 국회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
다.

대북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보아
왔던 것처럼 남북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개
하지 못할 부분들 또 집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사전 브리핑을 한다든지
또는 진행 후에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그
부분을 국회가 승인하는 이런 과정들을 너무 편
의상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새로운 기반 위에서 발전시켜 나갈 때 하나의 교
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기본합의서가 채택됐을 때 국회에서 그
것을 비준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
고 얘기했을 때 남북관계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비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했다가 결국 북쪽은

일방적으로 휴지조각화하는, 무실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전히 중요한 합의로 놓고 있지만 안 지켜지는 부분들,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북한에서 또 우리 일부 차원에서…… 하나의 금과옥조로 여기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초당적인 어떤 지지를 받는 문서로 또는 합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하다. 정책 추진은 정부가 하되 그것이 일종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예산이 뒷받침될 때 반드시 국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창조적인 또는 건설적인 역할분담을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양창영 위원 다음, 내가 서보혁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재외동포문제, 해외·재외 국민 문제, 특히 75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에 관심을 갖고 힘을 써왔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남과 북이 통일기반을 마련하는 데 국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동포 사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서.

금년 초에 외통부에서 청와대에 업무보고 할 때 통일·공공 외교를 위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활용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남북통일에 있어서 재외동포들의 역할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진술인 서보혁 감사합니다.

우리 통일의 주역은 남북 주민들과 함께 해외 동포 이렇게 3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위상이나 또 국내 정치적인 자신감이나 경제적 능력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할 때 해외동포들이 통일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 내의 관련 기구는 재외동포재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평통이 해외 동포들과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해외 동포들이 보다 자주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또 우리 국

회와 보다 긴밀한 소통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남북관계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이 재외동포 사회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국적…… 국가 시민의 자격을 갖고서 북에 있는 이산가족과의 상봉이나 또는 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많이 장려하고 또 그 성과가 우리 남한 사회에 환류되어서 남북 간 발전에 있어서도 해외 동포들하고 우리 남한의 역량이 보다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양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함진규 위원입니다.

김연철 교수님이나 서보혁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와 같은 유일한 분단국가였던 서독과 동독은 통일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서독은 1961년에 잘츠기터 기록보관소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는데 한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제가 내용을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 보면 ‘북한 인권 가해자 고발 리포트’라고 그래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원티드(WANTED)’ 해 가지고 여러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권침해의 한 경우로 아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예인데 여기 보면 내부에 있었던 일인데 도로 보수공사를 하는 가운데 게을리한다는 것을 트집 잡아 가지고 상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만을 표시하니 까 권총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 그 이후에 아마 그 보안요원은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게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탈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인권의 참상이라는 게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는 인권문제가 아주 광범위

하게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보다 상당히 폐쇄적인 사회라 숫자 파악, 정황,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인권법 제정하고 인권기록보존소 설립이 지연되는 사이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인천 송도나 서울에 사무실을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으로는 북한도 우리 한반도, 같은 국가라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실효적인 헌법이 지금 지배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헌법이 북한에 미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 후에 이런 것도 분명히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인권법 제정이라든가 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통해서 그런 걸 생생하게 다 기록을 해 줘야 되고 말이지요, 동·서독마냥.

그런데 우리는 웬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민간인들이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입장에 불과한데 지금 이걸 보면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자, 인권재단을 설립하자, 인권기록보존소를 두자, 민간에 활동비 보조하자, 북한 인권 체험관을 두자, 탈북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진보 쪽에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 만들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한다, 또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한다,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남북관계를 저해하며 실효성이 없다 등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눈을 감고 있어야…… 이상하리만큼, 보수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진보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안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두 분이신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야 되느냐? 만약 이런 것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텐데 언제까지 이것을 내부 문제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눈을 감고 있어야 되는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서보혁 위원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서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북한 인권문제를 모니터링하고 또 국가 인권기구에서도 일해 본 경험이 있는데 북한 인권문제의 참혹한 상황은 사실 우리가 군사 권위주의 정권을 겪어 왔습니다마는 그것과도 비교할 바가 안 되는 세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엔에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도 나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올 초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한국에 북한 인권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의 방향, 정책 스타일에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스탠스를 달리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해 나가는 시대적인 어떤 과제 앞에서 그리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한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서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국제사회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특히 자유권 분야에서 했고 반면에 생존권 부분은 교류와……

○함진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요.

○진술인 서보혁 지원을 통해서 그걸 했고 그러나 반면에 이명박, 현 박근혜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분 없이 북한 인권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자는 얘기인데 일단 서독에서의 동독의 인권 침해, 베를린장벽 과정에서의 사망사례 등을 조사했던 인권침해기록보존소는 서독의 연방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잘츠기터 그쪽 지역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독 인권법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요.

○함진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보, 정치권이든 학계든 어느 분이든 표현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진보 세력들의 반대이유,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형태는 달리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핵심의 초점은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걸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그런 걸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이고,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분단국가 당사자 주체인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아직 통과 못 시키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가 아닌 일본이나 미국은 2004년, 2006년에 전부 인권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의 요지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시각은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경제적 주장,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이런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기록 하나 하지 못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이게 옳은 것인지 저는 한번 그걸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술인 서보혁 그래서 서독의 경우처럼 법적 인 조건 없이도 북한 인권침해 기록은 지금도 하고 있고 현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일본처럼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3년부터 지금 계속 발의되고 폐기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내 여론이 상당히 팽팽하게 갈려 있지요.

다만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상정국까지 역할을 하면서 일관되게 지지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맞대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는 일정하게 타협안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심윤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윤조 위원 오늘 네 분 교수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모두 말씀하시는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은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부와의 역할 분담이라고 할까요 국회 나름대로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의 통일정책이라고 하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89년도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정책에 이름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것은 국회에서 4당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정부에서 물론 이안을 입안했지만 그것을 국회에 갖고 와서 국회의 모든 정당이 당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통일정책으로 확립이 된 것이다, 그 통일정책이 갖는 힘의 근원은 역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는 데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것도 기본은 민족통일체 방안을 계승하는 것이다 하고 그런 입장도 표명된 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외통위에서도 통일부장관

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의 통일의 어떤 단계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얘기하는 작은 통일과 큰 통일의 단계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정합성을 갖추면서 나가느냐 하는 몫은 학자들의 몫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신 걸 보니까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최근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의 정합성을 갖고 발전해 온 것이냐 이것에 대한 학계의 정의, 정부의 재정립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회의 동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후에 국회회담을 하든 무슨 회담을 하든 그것이 힘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그것이 아닌 국회회담이건 무슨 회담이건 그것은 그냥 남북교류의 일환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냐……

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확립된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또 통일을 향한 과정으로 나가려면 먼저 우리의 이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진화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해 온 정책들을 한번 재정립해서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MB정부 때 비핵·개방·3000은 통일정책이 아니고 우리의 대북정책을 행하는 어떤 방법론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 즉 국민 여론을 집약하는 면에서의 국회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 들으면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우선 서 교수님께 여쭙어 보고요.

왜냐하면 서 교수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네 가지, 7·4공동성명, 기본 조약, 6·15, 10·4성명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한번 그것을 인도스(endorse)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단순한 인도스를 넘어서 그러한 대북 통일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89년도의 4당 합의와 같은 당 차원의 합의, 국회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 교수님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서보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도 통일 논의, 지금 통일 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급격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북한의 상황도 그렇고 동북아 환경, 이 세 차원에서 통일방안을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정부 내에서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계승이라 할까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상의 작은·큰 통일하고의 정합성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보태고 싶은 말씀은 통일 정책은 역시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 내의 합의 또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 특위에서 될지 어디서 할지 모릅니다마는 일단 우리 통일 비전을 만들어 내고 그것에 대한 법적 기초와 통일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국회가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역할에 일단은 방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제가 심분 공감하고요. 그런데……

○**심윤조 위원** 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나중에 시간 거의 다 됐을 때 그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진술인 서보혁** 알겠습니다.

○**심윤조 위원** 유호열 박사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준비위원회 있잖아요, 통일준비위원회 사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보면 진보적인 인사도 상당히 참여해서 골고루 균형 잡힌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 통일준비위원회의 역할 중에 큰 것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과 같은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인 정립, 실제와 결합을 해서 그것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정부가 받아서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정책위의장 두 명이 들어간 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갖고 국회에 와서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유호열** 지금 통일준비위원회는 그야말로 통일 준비를 위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총괄적인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만이 아니라 기재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또 법무부 이렇게 모든 부서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역시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일단 정책위의장 두 분이 참여를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어떤 합의를 이룰 때에는 국회와 위원회 사이의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미진하다고 할 부분 중의 하나가 결국 지자체와 통일준비위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국회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차원, 이것을 함께 아우르는 그것이 통일준비위원회의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윤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지환 교수님,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들었는데 자료를 훑어보니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그것이 신뢰프로세스다. 어떤 프로세스라는 것은 과정이니까 과정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봐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차이는 MB정부 때는 비핵·개방·3000이기 때문에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풀리지 않는데 신뢰프로세스에는 핵 문제 해결까지는 안 들어와 있고 비핵화의 어떤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상황이 계속 진전되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유연한 대북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황 교수님 의견 한번 다시 들려주시고요.

끝으로 그것 끝나면 서 교수님 아까 못 다 하신 말씀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술인 황지환**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상당히 열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훨씬 더 진화할 수 있고 진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과제에 나와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1단계와 2단계를 나눠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신뢰가 구축됨에 따라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진전된 모습을, 5·24해제 조치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연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런 남북관계 모습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남북 간의 협상을 통해서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

을 합니다.

○**진술인 서보혁** 우리 통일방안을 조금 계승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현 정부의 낮은 단계의 통일은 기존의 3단계 통일에서 화해·협력 단계에서 플러스, 좀 더 진전된 상태를 말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한 상태에서 최종적 통일 단계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할 것은 남북 간의 경제 통합하고 정치·법적인 통합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 주는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 화해·협력 단계 이후로 설정하지 말고 그것과 연동되어서 어떻게 이것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통일방안을 마련해 나갈 때 국제사회의 지지와 우리 국내 사회의 지지 이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데 국내 사회는 특히 우리 후세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통일방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혜택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 논리를 만들고 이것들을 북한한테 설득해 나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심윤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마지막으로 박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위원입니다.

질문이 네 분에게 다 가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1년 6개월 동안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지요. 그런데 별진전이 없거나 또는 후퇴하다가 금년 초에 통일대박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 가서 드레스덴 선언을 하셨는데 북한에서는 그것이 바로 흡수통일을 전제하는 것이다 하고 반박하고 나왔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상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 틀을 정립하거나 또 대화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상대인 북한에게 최소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이 될 것이다 하는 사전조치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그런 사전조치에 따라서 상호 기초적인 신뢰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

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이 후퇴했다가 유지되는 것 외에는 남북관계는 후퇴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대한 협상이 아직은 진전이 없지만 계속 되겠지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임기 1년 반이나 흘러갔는데 무엇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돌파할 것이냐, 그중의 하나가 5·24조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24조치에 우선 초점을 맞춘다면 5·24조치의 사실상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관한 의견을 우선 먼저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부터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질문이 또 있습니다.

○**진술인 김연철**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을 평가할 때 사실은 비전과 전략 측면에서 제시했던 담론들은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그렇고 유라시아 평화 구상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안 풀리는 것은 지금 현안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장기 비전전략과 상충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5·24조치입니다. 왜냐하면 5·24조치라는 게 너무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5·24조치 중에서 일단은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제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국회 차원에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위원** 조금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보혁 교수님.

○**진술인 서보혁** 저도 5·24조치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되었던 경실련통일협회 전문가 설문조사에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 국내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무력화하는, 사실상의 해제하는 정부의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유호열 교수님.

○**진술인 유호열** 예, 저는 드레스덴 구상은 그야말로 구상이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이라고 할 때 북쪽에 사전 타진을

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 그것을 좀 차별화 해서 접근하고 싶고요.

5·24조치에 대해서는 경실련은 전문가, 저도 물론 거기에 응답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모든 여론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60%에서 70%가 5·24 조치를 지금 단계에서는 해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5·24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5·24조치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저는 여기에 해답이 있지 않은가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해제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그런 단계보다는 그것을 우회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성과가 있을 때 5·24조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진술인 황지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5·24조치는 해제되고 완화돼야 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당장 무작정 해제하고 완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 계기를 만드는 노력을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북한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런 계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서 5·24조치를 넘어설 수 있는 노력들을 만들어내고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남북한 관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가 무척 긴박하고도 중요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큰 틀이 바뀔 수도 있지 않아요? 기존의 한·미·일의 관계와 중·러·북한의 관계가 깨지고 소위 미국의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또는 중국의 신행대국관계, 이제 심지어는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의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형세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점점 남북한의 입지는 좁아지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고 북한은 또 다시 일본이나 러시아에 가까워지면서 남북관계는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봐요. 남재준 국정원장이 작년에 국회에 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 순간에도 5MW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고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24조치의 궁극적 목적이 뭐였습니까?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그랬는데 결국 북한은 핵 개발은 계속하고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어느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북한을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24조치 이후에 경제적 피해가, 북한이 받은 피해가 2조 4000억으로 추정되고 대한민국이 받은 손해가 9조 4000억이라 4배예요. 또 중국은 북한의 경제의존도가 2007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대외교역의 67%였습니다. 그런데 5년 후 2012년 말에는 북한의 중국 교역의존도가 89%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통일 환경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따라서 5·24조치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아내야지요. 그렇게 한가지 않아요, 그리고 박근혜정부도 금년에 이런 것을 해결 못 하면, 임기 중반 넘으면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지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제에 관해서 국회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남겠지요. 대한민국 국회가 정식으로 북한에 ‘우리 국회회담 하자’ 그러면 수용할 것이냐?

두 번째, 수용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권한이 있는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무슨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노동당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대화 상대의 문제가 있고요. 과연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만약 남북 간에 국회회담이 열린다면 의제는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 안 열리는 것보다는 열리는 게 낫겠지요. 최소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북한은 수용할 것으로 보시는 건지 안 보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연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세적으로 보면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진술인 서보혁** 저는 남북 국회회담을 하면, 발표에 들어 있었는데요, 노동당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실효성을 높이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술인 유호열** 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회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대단히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역시 중심은 정상화라고 하면, 그것이 당 대 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하고 또 과거에 공산권 간에 당 대 당 협상하던 그 중국도 이미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당 대 당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하겠다, 저는 그 부분을 높이 사면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술인 황지환** 지금 상황에서 남북 국회회담이나 의회회담을 제안하면 저는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져서 지금의 악순환 고리가 선순환 고리가 될 때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용한다 그럴 경우에 가지고 있는 북한의 정치체제상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 소득은 적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합의를 해 나가면 일정한 소득

은 있을 것이라고, 득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또 다른 분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님.

그러면 김동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지요.

○**김동완 위원** 서보혁 교수님께 짧게 하나만……

국회가 회답을 한다고 할 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우리 국회와는 성격이 다르니까 정당 연석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노동당을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우리 남북관계의 협의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보혁 교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좀, 황지환 교수님은 그것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서보혁** 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감안해서 노동당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아직 없지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북일 간의 회담을 할 때 일본에서 당시 가네마루 신 자민당 전 총재 등 일본 의원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노동당이 상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이 어떤 경우에, 어떤 나라와의 정당, 의원외교에 나왔는지를 우리가 사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 국회회담이 보다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동완 위원** 혹시 독일 통일과정에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진술인 서보혁** 독일 통일과정에서도 당연히……

○**김동완 위원** 정당 연석회의……

○**진술인 서보혁** 예, 그렇습니다. 동·서독 간에…… 우리는 그 정당 연석회의라는 말이 북한의 그 제안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미지가 돼 있는데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좀 열어놓고 연구할 필요가 있고 동·서독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동완 위원** 동·서독의 그런 사례를 좀 자료로 한번 보내주시면…… 너무 좀 과한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고맙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함진규 위원** 저는 얼마 전에 자료에서 그런 걸 좀 봤는데 제가 교수님 이름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인민대학의 정치학과 국제관계 교수인 스즈훈인가, 제가 정확하게……

○**진술인 유호열** 정확하게 스인홍……

○**함진규 위원**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중국의 입장에서선 향후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국가이익이나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보통 거기서 교수님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교수님하고 달라서 정부에서 상당한 급수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바로는.

진보나 보수나, 학자들이 하시는 한국 사회에서의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시진핑 주석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수님들 보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저는 중국의 변화가 기존의 조중 우호관계, 동맹관계가 많이 와해되는 내지는 변화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보시는지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5·24 해제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제가 자료를 펴서 보니까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수천억 원씩 넘어갔어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게 북한에서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독일의 초기 통일 통합비용을 보니까 소득 GDP의 5% 그다음에 동독 GDP의 30%를 비용으로 지급하고 엄청난,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도 최소비용이 55조 원에서 많게는 277조 원까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통일이 저는 내일 올 수도 있고 이번 달 말에도 올 수 있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냐, 핵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냐 해 가지고 김정은한테

밀의 하위에서 또 열띤 반향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저는 통일 재원조달 비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마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재원 부담을 지금부터 해도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증세를 통하는 방법이라든가 통일복권이라든가 민간투자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네 분 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슬며시 오는 통일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국의 북한하고의 관계 또 시진핑이라는 지도자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개인적인 관계지만 그런 돈독한 관계가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하게 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유호열** 제가 마침 지난 토요일 날은 인민대학에 가서 한·미·중 세 나라 민간 전문가들과 1.5트랙의 회의를 했고요, 월요일 날은 칭화대학에 가서 한·중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가지고 전문가, 그야말로 중국사회과학원 플러스 과학자협회에 있는 분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변했냐 안 변했느냐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이 보는 북한 입장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과격하다 할 정도로 냉정하게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다만 중국정부가 어떻게 그러한 흐름을 정책화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저는 관건이지 중국 정부의 정책은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북한을 냉정하게 대하고 또 합리적으로 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까 5·24조치를 얘기할 때 경제적으로 우리가 엄청 손해고 북한에 대한 효과가 없다, 저는 그건 한 부분만 본다고 생각합니다. 5·24조치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외교·군사적인 측면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 성과는 지금 우리가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히 많은 성과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면 안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5·24조치에 따라서 중국의 역할이 커진 건 틀림없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교역이 늘어나고 중국의 영향이 커진 것이 그렇다면 과연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부정적이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저변에 흐르는 새로운 흐름을 중국이 일정한 정도 담당했다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정책을 바꿔야 된다, 저는 너무 성급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원혜영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 김연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예, 김연철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연철 중국의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전략적 딜레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의 동북아지역 전략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될 어떤 필요성 사이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몇 년 전에 왕자루이—현재 대외연락부장이지요—만났을 때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왕자루이 연락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중국의 이해에 부합되면 찬성하고 중국의 이해와 반하면 우리는 반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정답인 것 같고요.

통일비용 문제는 정부기관에서도 이미 밝혔지만 결국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를 우리가 통일했을 때 보전하는 게 사실 통일비용인데 급격한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통일이 7분의 1 정도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결과들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5·24조치 해제 같은 것이 통일비용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원혜영 진술인 누가 더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진술인 서보혁 위원님께서 한 분씩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가지고 제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혜영 예, 그러시지요.

○진술인 서보혁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포함한 주변 4개국한테 통일외교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 포용정책 할 때나 지금까지 새로운 대북정책 할 때나 콘센서스가 주변 4개국들한테 통일에 대한 지지를 받는 그런 균형외교를 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 그것과 연장해서 통일비용을 우리가 최소화하면서 부드러운 통일을 하기 위해서도 남북한 화해·협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나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을 줄이면서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황지환 교수님도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진술인 황지환 기회를 주시면 당연히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예,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황지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학자들 만나 보면 삼사 년, 사오 년 전에 했던 이야기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좀 달라졌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비판적인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보는 북한에 대한 관점과 한반도의 관점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현상 유지적인 전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든지 한반도에 어떤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위 독일식의 조기 통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주변 강대국들에게 얼마나 동의를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독일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헌법적인 의미와 국제법적인, 유엔이나 이런 데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는 상당한 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괴리를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제화에 관련된 논의들 그리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들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혜영 고맙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병석 위원 유호열 교수님께 한번 좀 물어보겠는데요.

통일이 되면 통일의 효과, 통일의 편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부 통계가 있습니까?

○진술인 유호열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편차라고……

○박병석 위원 아니,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느냐고요.

○진술인 유호열 정부에서 프로젝트로 준 그 결과를 수용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통일부가 통일비용, ‘통일이 되면 비용이 이렇게 듭니다’ 하는 것은, 55조 내지 277조의 비용이 든다 하는 것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통일부장관에게 ‘통일이 되면 통일의 편익, 통일의 효과가 얼마입니까?’, 통계가 없다 그래요. 이게 현 정부의 실패입니다. 정말로 통일이 대박이라면 통일비용은 이렇게 드는데 통일의 편익 효과는 이렇게 듭니다 하는 걸 국민들에게 비교해 주셔야지요. 그런 통계도 없는 정부에게 그냥 말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노무현·김정일이지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전변에 대선 때 유출됐던 대화록을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북한의 김정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들은, 즉 중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중국의 동북사성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미 김정일조차도 중국이 북한을 자기의 경제적 예측화, 지방화를 시킨다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남북한이 정신 차리고 국제적 동북아 환경을 헤쳐 나가야지, 특히 우리 학계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할 말씀 하시고 여론을 제대로 끌어 주셔야 된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마지막으로 홍영표 위원님 본질의 겸 보충질의 겸 해 주시지요.

○홍영표 위원 인천 부평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북발전특위의 첫 번째 공청회를 보면서 사실 남북문제야말로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이야기하고 또 실제적 진실 이런 것들을 국민

들이 알고 남북문제나 통일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 국회 남북발전특위가 해야 할 역할은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 극단적으로 남북관계나 통일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오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돈 오버도퍼라는 미국 기자가 쓴 투 코리아(The Two Koreas), 두 개의 한국 그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 남북관계에서 몇 십 년 동안 위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의 하나가 특히 90년대에 북핵을 둘러싸고 미국 워싱턴에서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느냐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그것을 계량화해서 아마 다 따져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한미군사령관이나 군부 쪽에서 전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고 그때 대화 국면에 들어갔다는 그것을 오버도퍼 저자가 아주 실증적으로 썼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남북관계가 파탄이 나고 정말 전쟁 상태로까지 갔을 때 그러면 얼마만큼 그게 큰 재앙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선 그 북핵 문제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군부가 반대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는 지금 지난 몇 십 년 동안 남북관계를 쭉 보면 정말 남북관계를 둘러싼 4대국의 입장, 그다음 북의 입장, 남 정부의 입장, 이런 것 굉장히 서로 잘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론도 내렸습니다마는 결국은 남과 북이 주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요. 그래서 남과 북이 중심이 됐을 때 그래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좀 더 진전이 있었고 평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됐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국제정세가 특히 중국의 급부상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 동북아 정세 자체도 다시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을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 왔던 대

로만 볼 수도 없고 그것도 저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 미 · 일 삼각동맹도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 미래를 다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겸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특위에서 여당 위원님들하고도 또 전문가 분들하고도 정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부터 어떤 냉엄한 현실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좀 공유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 남북문제에 대한 정책이든 제도든 이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특히 지난 이명박정부 이래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극단적인 주장과 입장들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마당이 바로 이 특위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남북문제를 어떤 정권적 차원을 넘어서서 온 국민적 합의 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평통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최근에는 또 통일준비위원회도 만든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것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특위가 남북문제에 대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공론화하고 함께 공유하는 이런 장으로 해야 된다 하는 데서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 교수님이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유호열 교수님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연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진보 · 보수라는 어떤 기준을 갖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83년 우리가 아웅산사태를 겪었습니다. 북한이 전두환 대통령의 암살 시도를 했고 또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국무위원들이 사망한 사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4년에 전두환정부는 북한의 수해물자를 받았고 1985년에 경제회담과 또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을 실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그 당시의 그러한 판단이라는 게 남북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상황 관리적 측면이라든가 또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선택에 시사점을 얻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술인 유호열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나 제가 첨언한다면 우리 정부 구조상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대북정책은 5년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후해서 임기 중간이지만 힘이 빠질 때는 대북정책이 안정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다,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특위를 포함해서 국회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 대북 · 통일 정책의 지속성을 국회가 또 국회의원들이 유지해 주셔야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이 바뀌더라도 큰 틀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기회를 좀 더 발전적으로 진화시켜 주시면 우리 전문가들도 기꺼이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김연철 교수님, 서보혁 교수님, 유호열 교수님, 황지환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발표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네 분 진술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공감대가 크고 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은 말씀을 해 주셨고 황지환 교수님께서도 행정부나 청와대와 다른 국회의 주체적인 인식과 그 실천이 만들어지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유호열 교수님은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설정부터 국민 의견 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김연철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선 우리 특위가 남북관계발전법부터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이것을 실질적으로 변화된 정세에 맞게 또 앞으로 남북관계 지향에 고려해서 활성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다룰 과제

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보혁 교수님께서 우리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통위와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제 오랜 주장이 국회의 여러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상설화·활성화해야 된다. 적어도 우리 16개 상임위원회에 5개씩의 소위원회만 해도,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별 수요가 있을 텐데 적어도 70개, 100개 가까운 국정외 주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책임 있게 다루는 소위원회가 탄생한다, 그것은 국회의 책임성,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질·양으로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남북관계발전특위가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관계 문제는 워낙 한 상임위에서 독점적으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도 이런 남북관계발전특위가 탄생된 배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그런 조건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얼마나 차별성을 가지고 또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또 실천적인 과제를 도출해내고 실행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 특위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진술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전문가로서 좋은 조언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제안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논의도 아까 홍영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다 허심탄회한 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비공개 간담회나 공청회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건대는 심윤조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 우리 통일문제의 기조를 여야 4당이 만들어냈듯이 지금 이 단계에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뭔가 대북관계의 기조가 될 수 있는 정책이나 원칙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하는 데 우리 특위가 그 산파역을 하면 좋겠다 이런 희망도 가져 봅니다.

다시 한 번 진술인들과 늦게까지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15인)

김 광 립	김 동 완	김 정 록	노 응 래
박 병 석	박 홍 근	심 윤 조	안 덕 수
양 창 영	원 혜 영	이 목 희	정 병 국
조 정 식	함 진 규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종 후
전 문 위 원	이 용 준

○출석 진술인

김연철(인제대학교 통일학부 부교수)

서보혁(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유호열(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황지환(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